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1년 7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국민연금,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.58%

-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 초과

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위원장: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, 이하 기금위)는 7월 2일(금) 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- 이번 회의에서는 「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», 「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», 「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-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,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.

■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분 운용 수익률은 9.58%로 확정되었으며, 기준수익률(벤치마크*, 8.59%)을 0.99%p 상회하였다.

*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;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수익률

-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.1조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(51.2조원)의 약 1.4배, 연금 급여지급액(25.6조원)의 약 2.8배에 해당한다.
- 최근 3년('18~'20) 연평균 수익률은 6.54%로 기준수익률(6.29%) 대비 0.25%p, 5년('16~'20) 연평균 수익률은 6.31%로 기준수익률(6.02%) 대비 0.30%p 높았다.

- 2020년 기금운용 수익률(9.58%)은 2019년 11.34%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.
- 2020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34.66%, 해외주식 10.22%, 국내채권 1.71%, 해외채권 0.19%, 대체투자 2.57%이며,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 상승이 전체 기금 수익률을 견인하였다.
 - 국내주식 수익률 34.66%는 전년(12.46%) 대비 큰 폭 상승하였으며, 기준수익률(33.45%)을 1.21%p 상회하였다.
 - 해외주식 수익률 역시 10.22%로 기준수익률(8.81%) 대비 1.41%p 높았으며, 달러기준 수익률*은 17.31%이다.

* '20년 환율 하락으로 인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달러 기준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남

< 자산군별 수익률, 기준수익률(벤치마크) 대비 초과 성과 >

(단위: %, %pt)

구분	수익률(원화 기준)	기준수익률 초과분
국내주식	34.66	+1.21
해외주식	10.22	+1.41
대체투자	2.57	+1.00
국내채권	1.71	+0.13
해외채권	0.19	+0.72

-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하여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.7%(기본급 대비)로 확정되었다.
 - 성과보상지침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86.7% 중 76.0%는 2021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.7%는 2022년에 지급한다.

■ 또한,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과제 결과를 보고받고, 국민연금 성과제고를 위한 2021년 정책제언 과제를 확정하였다.

- 2021년 정책제언 과제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평가체계, 대체투자 위탁운용, 운용비용 관리역량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.

* △국민연금기금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평가체계 개선 및 활용계획, △대체투자 위탁운용 사후관리 체계 개선방안, △운용비용 관리역량 강화방안 등

- 올해 정책제언 과제를 수행하고, 그 평가 결과 등을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.

■ 권덕철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2020년도 운용 수익률 9.58%, 수익금 72.1조원을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,

-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.
-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532,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재정과, 2021.7.2.

II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의 길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

- 관계부처 합동, 「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」 발표

< “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”, “실질적 자립기반 마련”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>

- (보호권): ▲ 보호기간 연장(現 18세→아동 의사에 따라 24세) ▲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
- (자립동반자): ▲ 전담기관 확대(8개 → 17개 시도) ▲ 전담인력 확충(120명)
- (자립버팀목): ▲ 자립수당 확대(월 30만 원, 3년 → 5년) ▲ 주거 등 지원 확대(10개 → 17개 시도) ▲ 아동 자산형성지원 확대(정부 매칭비율 1:1→1:2, 지원 한도 월 5만원 → 10만원)
- (자립역량): ▲ 고등교육 기회 보장(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) ▲ 취업 지원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) ▲ 기술훈련 확대(마이스터고 진학 기회,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)

- (심리지원): ▲ 심리상담·치료서비스 확대, 지역자원(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) 연계 ▲ 당사자 모임(바람개비서포터즈) 지원 ▲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
- (제도기반): ▲ 명칭 변경(보호종료아동 → 자립준비청년 등) ▲ 법령 정비 ▲ 멘토링 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

■ 정부는 7월 13일(화)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『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』을 발표하였습니다.

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*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(年 2500명)되며,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

*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, 시설에서 보호

○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'19), 주거지원통합서비스('19)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, 주요 자립지표*도 상승해왔습니다.

* (주거안정률) ('14) 68.8% → ('20) 78.6%, (자립률) ('14) 76.1% → ('20) 81.1%

○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,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

* 보호종료아동vs.일반청년: ▲(월임금) 182만원 < 233만원
 ▲(실업률) 16.3% > 8.9%
 ▲(대학진학률) 62.8% < 70.4%
 ▲(자살생각 비율) 50.0% > 16.3%

■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『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』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'21.4~7월), 실태조사, 당사자·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■ 이번 대책은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”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 방향,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비전	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,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
기본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✓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✓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
6대 주요 추진 과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“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” ② “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” ③ “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” ④ “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” ⑤ “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” ⑥ “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”

① 보호연장 강화 :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

■ 아동이 ‘보호’에서 ‘자립’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

-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“만18세”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“만24세”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.
 -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,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.
-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·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*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.

* (사례) 긴급수술, 휴대전화 개통, 여권 발급, 계좌 개설, 의료서류 발급 등

-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,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,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‘공공후견인 제도’도 도입할 계획입니다.

㉔ 자립지원전담기관·인력 확충: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
■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.

-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*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·도로 확대할 계획이며,

* 서울, 부산, 경기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, 제주 등 8개 시·도

-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, 생활·주거·진로·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.

* (21) 일부 시·도 자체적 총원 → (22)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

㉕ 소득·주거안전망 강화: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

■ 소득 안전망: 자립수당(3→5년),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

- (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) '21.8월부터 자립수당*(월 30만원)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.

* (19) 자립수당 신설 → (20)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→ (21.8)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

- (아동자산형성사업) '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:1에서 1:2로 확대하고,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.

* '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,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

- (자립정착금)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(지자체)을 단계적으로 확대(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)합니다.

■ 주거 안전망 : 공공 주거지원, 수요 맞춤형 공급 등

- (공공임대)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
* '22년까지 2,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(3년간 전세 4.5천호+매입 1.2천호+건설 0.3천호)
 -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- (주거비 등 사례관리)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, 심리상담,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.
* ('21) 주거비 10개 시도, 377명 → ('22)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, 1,000명 이상으로 확대
- (맞춤형 주거) 역세권,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, 2~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.
- (보호연장아동 지원)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,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.

4 진로·진학·취업 등: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

-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·진학·취업 등 보호 중,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■ 진학기회 확대 : 고등교육 기회,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

- (진학기회 보장)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(대교협 등)와 협의를 추진합니다.
- (학업여건 지원)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*하고,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.
*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

- (진로탐색) 보호단체에서부터 커리어넷(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)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,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·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■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: 국민취업지원제도, 전문기술 훈련 등

- (취업지원)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·연계하겠습니다.
- (전문기술 훈련기회) 학습·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.

■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: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

- (자립생활 역량)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* 확대를 추진합니다.
* (21) 고등학생~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, 3,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
- (금융교육)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,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(정보활용 역량)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(자립정보ON app)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.

⑤ 심리·정서 지원: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

■ 심리지원 확대 : 심리상담·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

- (심리지원)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·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,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(지역자원 연계)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(244개소)의 ‘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’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·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.

*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, 검사,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

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: 멘토링

- (당사자 모임 지원)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(당사자 자조모임)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.

* -(‘11~’21) 전국 1개(아동권리보장원) → (‘22~) 권역별 6개(아동권리보장원+전담기관)

- (범죄피해 예방교육)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* 등을 실시하고,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.

*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, 심리상담 연계, 유대관계 형성 등

⑥ 법령 정비 등: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

-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: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‘자립준비청년’ 등 명칭 변경: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‘보호종료아동’ 명칭을 ‘자립준비청년’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.

* 아동권리보장원(‘21.6.23~7.6) 보호종료아동 당사자, 종사자 등 대상,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

■ 민·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

- (민관 연계 강화)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·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·전달할 계획입니다.

- (멘토링)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, 캠페인,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■ 김부겸 국무총리는,

- “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,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”이라고 밝혔으며,
- “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552,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,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,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,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, 교육부 기획담당관,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,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,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, 경찰청 아동청소년과, 2021.7.13.

III

**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연구·개발을 통해
예방적 건강관리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**

- ‘21년도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(7.22.)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직무대행 강재현)은 7월 22일(목) 「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.

*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,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행

- ‘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’은 정보통신기술(ICT)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.

○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진행된다. 지난 2020년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.

■ 올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대한 5개 분야* 공모(‘21.3~5월)를 통해 사업 목표·전략, 세부 계획,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6개 신규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.

* ①②(도농복합형/도시형)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, ③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, ④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 기반의 소생활권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, ⑤지역사회 보건의료·복지 연계체계 연구

■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6개 연구과제와 2020년에 선정된 사전기획형 과제 중 평가를 통해 후속지원이 확정된 2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.

○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-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-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■ 새롭게 선정된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① 병원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모델 실증(서울아산병원)

- (주요 내용) 지역사회 기반 호흡기 질환자, 심혈관 질환자 및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세부 유형별 공용 건강관리 시스템(맞춤형 운동관리 프로그램) 개발
- (활용 계획)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을 적용, 병원-보건소-가정을 시스템과 연계한 리빙랩으로 서비스의 유용성 실증 및 플랫폼 연계 체계 마련

② 실시간 심전도/혈당 기반 지역사회 취약층 대상 스마트 안심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(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)

- (주요 내용)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헬스 안심관리상황센터 구축 및 IoT 기반 당뇨/심부정맥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Telemetry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
- (활용 계획) 지역사회 기반 당뇨/심부정맥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디자인 및 실증

③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(가천대학교 길병원)

- (주요 내용) 임신 전/임신/출산 후로 분절되어 있는 지역사회 가임기 여성 통합 관리체계 구축,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, 자가입력정보 등을 활용한 고위험 산모건강관리서비스 구축
- (활용 계획)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근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스마트 건강관리체계 전국 확산모델 개발

④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(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)

- (주요 내용)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하여 소생활권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
- (활용 계획) 서비스 모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, 평가방법론에 따른 서비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고도화

⑤ 방문의료와 ICT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(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)

- (주요 내용) 방문의료 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전달체제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협력관리 모형 개발
- (활용 계획)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협력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, 돌봄 관련 기술 발전 및 정책 고도화

⑥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(㈜디케이아이 테크놀로지)

- (주요 내용)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서 생산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- (활용 계획) 데이터의 상호운용성, 데이터 보안,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체계 마련,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■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“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여러 가지 건강 위협 요인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과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○ 더불어 “올해 2차년도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·확산하는 데 주력하며 기존 연구 과제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다.”고 전했다.

-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사업단장 홍윤철 교수는 “서비스 R&D사업은 무형의 서비스 모델이 주요 성과로 도출되는 만큼, 우리 사업단에서 지역사회와 서비스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552, 보건복지부와 건강정책과, 한국건강증진개발원 R&D기획팀, 2021.7.22.

IV

“요양기관 현지 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” 합리화한다.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(7.27.~9.6.)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(화)부터 9월 6일(월)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-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*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.

*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,

-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
- 부당청구 금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 별 형평성 문제 대두

-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*을 완화하고, 최저부당비율**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행정처분기준표 개선)

* (월평균 부당금액)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

** (부당비율) (총 부당금액)/(요양급여비용 총액+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)×100

-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 완화(20만 원 → 40만 원)
- 총 부당금액이 크어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·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하향 변경(0.5% 이상 → 0.1% 이상)

〈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 변경 예시 〉

구분	월평균 부당금액	부당비율	행정처분	
			기존	개정안
A 병원	35만원	1%	영업정지 10일	없음
B 병원	800만원	0.4%	없음	영업정지 25일

■ 한편,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■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- 이번 개정안에 대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-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〈 의견 제출방법(우편) 〉

□ 제출처
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(4층)
- FAX : 044-202-3936

□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**통합입법예고시스템**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587,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, 2021.7.27.